

개혁 개방의 심화: 중국 12기 전인대 2차회의의 의미와 시사점

이태환(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thlee@sejong.org

3월 5일 개막되어 13일 폐막된 제 12기 전국인대 (전인대) 제 2차 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회의에서 표명된 시진핑 정부의 국내외 정책들은 올 한해만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실행될 정책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그중에서도 경제정책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경제전문가 설문조사에서 49명중 27명이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중국 경제 침체가 미 경기 회복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한데서 알 수 있듯이 중국경제가 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대외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청사진이 나올 때가 되었다는 기대도 작용했다.

중국인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77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안정속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개혁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개방의 확대와 적극적인 외교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개혁과 혁신뿐 아니라 정신문명과 생태환경, 문화, 소프트파워, 과학기술, 법치확립을 강조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개혁을 추구하는 동시에 개혁, 개방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중국은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77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안정속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개혁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개방의 확대와 적극적인 외교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개혁과 혁신뿐 아니라 정신문명과 생태환경, 문화, 소프트파워, 과학기술, 법치확립을 강조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개혁을 추구하는 동시에 개혁, 개방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안정적 경제성장과 개혁 개방의 심화

개막식에서 발표된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보면 반부패, 행정, 재무, 금융, 환율개혁, 국유기업 개혁, 소비 확대, 농촌 발전, 환경 문제, 대외개방 심화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 방향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혁을 통한 성장 방식의 전환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경제성장 목표치를 7.5%로 예상보다 높은 작년도와 같은 수치로 잡은 것도 개혁 못지 않게 성장을 이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기 3중 전회에서 강조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내수중심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의 비중을 점차 늘려 가는데 역점을 두는 방식으로 경제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 침체를 막고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내수시장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이다. 때문에 이를 위한 기반 확충과 인프라 구축, 비즈니스에 대한 행정적 규제 완화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18기 3중 전회에서 강조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내수중심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의 비중을 점차 늘려 가는데 역점을 두는 방식으로 경제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 침체를 막고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내수시장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이다. 때문에 이를 위한 기반 확충과 인프라 구축, 비즈니스에 대한 행정적 규제 완화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른 한편, 개혁과 성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여

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 성패 여부는 세부적 실천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는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둘째, 국유기업의 개혁과 민간자본 유치확대이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과정에서 국유자산을 폭리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유기업 개혁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의 국유기업수는 2013년 기준 1만 8,000개 정도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규모는 21조 위안으로 급증하여 중국정부는 2013년부터 국유사업 부문에 민간자본 유치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 석유, 전기, 철도, 전신, 자원개발 등 공공분야에 대한 진입을 허용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어서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개혁과정에서 민간자본 유입 허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투자 인허가를 윈 스톱 체제로 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제도를 개혁해 등록허가에 앞서 면허를 먼저 발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인간 중심의 도시화라는 혁신형 신형 도시화 정책이다. 호구제도를 개혁하여 도시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농민공과 자녀들을 도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수 진작을 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형 신형 도시화 가속에 대비한 인프라 건설 참여 등 대중국 진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금융통화정책이다. 리커창 총리가 거시조정 정책과 안정 성장, 일정한 취업률 보장, 통화 팽창 상한 억제에 나설 것이라 언급한데에 잘 나타나 있다. 재정적자 목표치를 지난해 1조 2,000억 위안보다 늘어난 GDP의 2.1%에 해당하는 1조 3,500억 위안으로 정한 것,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을 3.5% 선에서 억제하고 총통화량 증가율은 13%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등이 그러한 내용을 반영한다. 민간자본의 주식에 참여를 장려하고 금융기구에 투자하며 중개서비스 기구에 융자하도록 유도한다. 또 인민폐환율이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환율 상하변동 구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1%로 설정된 위안화 환율 변동 폭을 2%로 확대했다.

넷째, 인간 중심의 도시화라는 혁신형 신형 도시

화 정책이다. 호구제도를 개혁하여 도시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농민공과 자녀들을 도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수 진작을 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형 신형 도시화 가속에 대비한 인프라 건설 참여 등 대중국 진출 기회가 증대될 전망이다.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단계의 대외개방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시작된 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확대 실시와 내수확대를 위한 서비스업 개방이다. 시주석은 상하이시 대표단과 만나 새로운 개혁개방의 시험대인 상하이 자유무역구 건설과 관련, 개혁과 혁신을 통해 더욱 대담하게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으로 자유무역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 서비스업 개방과 더불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더 나은 여건이 조성되어 외자 유치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다섯째,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오염에 대한 강력한 대처이다. 인민들의 원성으로 자리잡은 환경 오염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점이 과거보다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화력발전소 정비와 소형 석탄 보일러 5만기와 오염 배출량이 많은 차량 600만대를 퇴출시키는 세부계획을 제시하고 기초 인프라 시설 구축을 확대하면서 비석탄 에너지 사용량을 22.3%으로 높이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도 각 3%와 2.9% 낮추겠다고 한 것 등이다.

여섯째, 대외경제정책에 있어 특징은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단계의 대외개방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시작된 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확대 실시와 내수확대를 위한 서비스업 개방이다. 시주석은 상하이시 대표단과 만나 새로운 개혁개방의 시험대인 '상하이 자유무역구 건설'과 관련, 개혁과 혁신을 통해 더욱 대담하게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으로 자유무역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 서비스업 개방과 더불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더 나은 여건이

조성되어 외자 유치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적극적 대외정책

시진핑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대국외교, 주변국 외교, 개발도상국과 다자 외교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해가는 한편, 시주석 취임 이후 첫 번째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와도 관계 강화를 추진했다. 주변국 외교에도 역점을 두어 21개 주변국과 고위급 교류를 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 4대주 22개국을 순방하였고, 65명의 외국 원수와 정부 지도자를 영접하였으며, 300여 명 이상의 외국 정계인사와의 회담을 통해 정상외교를 펼쳤다.

대외관계에 있어 금년에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국방개혁을 통한 강군건설(強軍建設)이다. 해방군 대표단 전체회의에서 시주석은 국가의 핵심이익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고 '강군건설' 목표 실현을 위해 국방과 군대 개혁을 심화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시주석은 경제와 군사 및 대외관계에서 가장 핵심적 정책 결정 기구의 역할을 할 '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와 '국가안전위원회', '인터넷영도소조' 조장에 이어 '심화 국방군대개혁영도소조' 조장을 맡음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방예산도 전년도보다 많은 12.2%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동북아 안보질서 재건축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면서 강군 건설과 더불어 국가의 핵심이익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을 의미한다. 예방외교차원을 넘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방개혁을 통한 강군건설(強軍建設)이다. 해방군 대표단 전체회의에서 시주석은 국가의 핵심이익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고 '강군건설' 목표 실현을 위해 국방과 군대 개혁을 심화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시주석은 경제와 군사 및 대

외관계에서 가장 핵심적 정책 결정 기구의 역할을 할 '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와 '국가안전위원회', '인터넷영도소조' 조장에 이어 '심화 국방군대개혁 영도소조' 조장을 맡음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방예산도 전년도보다 높은 12.2%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동북아 안보질서 재건축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동아시아 안보 질서 재건축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의 주변국 외교와 대일관계에서 단호한 입장과 강력한 대응이다. 리커창 총리가 양회 폐막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표명하면서도 역사의 수레를 역행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은 조어도와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대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일관계와 관련, 왕이(王毅)외교부장은 3월 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면 국면은 결코 중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역사와 영토문제에서는 타협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일관계가 무력 충돌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일간 세력구도 재편을 통한 동북아 안보 질서재건축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왕이 외교부장은 첫번째로 한반도에서 도발은 절대 있어서 안 되는 레드라인임을 강조한 것과 둘째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진정하고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임을 강조했다. 도발 불용을 강조하고 도발이 레드라인임을 천명한 것은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과거보다 예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핵화가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선결조건임을 표명한 것은 비핵화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더 중요함을 강조해 오던 과거 입장과 비교할 때 변화이다.

셋째, 선제적인 한반도 안정 정책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왕이 외교부장은 첫번째로 한반도에서 도발은 절대 있어서 안 되는 레드라인임을 강조하고 둘째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진정하고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임을 강조했다. 도발 불용을 강조하고 도

발이 레드라인임을 천명한 것은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과거보다 예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핵화가 진정된 한반도 평화의 선결 조건임을 표명한 것은 비핵화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더 중요함을 강조해 오던 과거 입장과 비교할 때 변화이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중국이 향후 지역 내 갈등국면을 어떻게 처리하고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해갈 것인지, 또 역점을 두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여 동북아 안보 질서를 재건축해 갈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금번 전인대 결과가 동북아 안보 환경 및 한중 경제, 안보 협력등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에서 강군 건설을 통해 동북아 안보 질서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주석의 강력한 리더십이 이를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미중관계는 신형대국관계를 기초로 하여 지속적으로 협력 지향적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의 경제적 상호의존뿐 아니라 중국의 국내적 상황이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무력충돌은 회피하면서도 중국의 주도적 입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대립구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는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를 토대로 중국이 일본에 맞서 안보질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동북아 다자 협력에서 한중일 협력 기제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 문제 등에서 중국이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미중 양국관계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핵문제에 대해 한미중이 좀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협의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차원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여 좀 더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회들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외전략에 북핵과 더불어 한반도 통일이 주요 이슈가 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 문제 등에서 중국이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미중 양국관계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핵문제에 대해 한미중이 좀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협의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차원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여 좀 더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회들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외전략에 북핵과 더불어 한반도 통일이 주요 이슈가 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전면적인 자유무역구 확대 실시를 비롯한 새로운 차원의 대외개방과 외자 유치 정책은 한국에 도전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의 측면이 강하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금융, 서비스 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정세와 정책」 최근 출판목록

2014년 3월호 (통권 216호)

엄상윤 “통일논의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
백학순 “남북고위급 접촉: 의의와 성과, 전망과 대책”
진창수 “아베정권의 행방과 한일관계 전망”
김성철 “중국·일본의 갈등과 한반도”

2014년 2월호 (통권 215호)

이상현 “2014년 국제정세 전망”
정철호 “中 CADIZ설정과 한국의 KADIZ확대 따른 과제”
이태환 “2014년 중국정세 전망”
이면우 “2014년 일본정세 전망”
정은숙 “2014년 러시아정세 전망”
양운철 “2014년 북한정세 전망”

2014년 1월호 (통권 214호)

이상현, “2014년 국제정세 전망”
이대우, “2014년 미국정세 전망”
이태환, “2014년 중국정세 전망”
이면우, “2014년 일본정세 전망”
정은숙, “2014년 러시아정세 전망”
양운철, “2014년 북한정세 전망”

2013년 12월호 (통권 213호)

이상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이행을 위한 과제와 전략”
이종석,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제언: 거시적 관점에서”
홍현익, “푸틴대통령 방한과 한·러 전략적 협력방안”
김기수, “한·미 MD협력과 한·미의 이해계산”
엄상윤, “중국의 경제혁신, 부패청산, 그리고 민주주의:
멀고 먼 개혁의 길”
문순보, “북한의 위기조성전술과 한국의 대응”
정성장, “김정은 체제 2년 평가”

2013년 11월호 (통권 212호)

진창수,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손병권, “연방정부 폐쇄로 본 미국 의회정치 양극화”
이승주, “2013 APEC 정상회의 평가”
이상현, “제45차 한미 SCM 평가와 향후 과제”

2013년 10월호 (통권 211호)

백학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인가?”
강선주, “G20 정상회의의 미래와 중견국의 역할”
김기수, “중국경제가 어려운 이유”
강명세, “대자부: 일본의 극우국가주의”

2013년 9월호 (통권 210호)

엄상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남북관계 전망”
진창수, “참여연 선거 이후 일본 정국동향과 한일관계”
이종석, “북한의 ‘황해남도 강령군 경제특구 계획’ 과
NLL”
오경섭, “10대원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정치적 의미”
정철호,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연합작전체제 보완책”

2013년 8월호 (통권 209호)

이종석,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성찰”
양운철, “6.28조치 시행 1년, 북한의 경제개혁 현황”
정상화, “일본 아베노믹스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이상호, “최근 사태를 둘러싼 사이버안보의 중요성”

2013년 특집 (통권 208호)

『정세와 정책』 편집인, “특집: 한중 정상회담”
이태환, “2013년 한중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
이상현, “한중정상회담과 북핵 문제”
정환우, “한중 FTA 협상의 진전을 위한 과제”
박재우, “2013년 한중정상회담: 한중 인문교류”

2013년 7월호 (통권 207호)

문순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2013년 전반기
평가”
이태환, “오바마-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김수암, “탈북 청소년 강제송환 사건과 탈북자 보호 방안”
정철호, “2013년 중국 국방백서의 대 한국 전략 함의”

2013년 6월호 (통권 206호)

엄상윤,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조성렬,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추진 방도: 서울 프로
세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백학순, “2013년 전반기의 한반도위기: 평가와 대책”
강명세, “일본의 우익 국수주의: 균형을 상실한 추락”

2013년 5월호 (통권 205호)

이대우, “증가하는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
홍현익, “북한 핵 보유 대처 방안”
정철호, “미국의 북핵 정책 변화 전망과 대응 정책방향”
정성장, “김정은 체제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
평가”
김기수, “일본의 양적완화정책과 통화전쟁 논쟁: 숨겨진
정치경제적 계산”
정상화, “보아오 포럼과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 <http://www.sejong.org>에서 출력 가능함

세종연구소 학술지 안내

『국가전략』 제20권 1호 | 2014년 봄

- 목 차 -

[논문]

동아시아 다자주의 무역질서 형성과 한국의 전략	이용욱 · 하경석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유현정
북한의 인터넷 개방: 쿠바 사례를 통해 본 함의와 전망	고경민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정부형태, 정당정치, 그리고 노동시장제도	강명세
유럽의 집단 정체성의 정치화와 사회 안보 개념: 런던 및 노르웨이 테러 사건을 중심으로	김두진

회원제 안내

세종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회원제를 실시하여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방법】

- 연구소 홈페이지(www.sejong.org)에서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연간 회원자격이 취득됩니다.
- 연회비 : 일반회원 : 50,000원(1년), 120,000원(3년)
학생회원 : 30,000원(1년), 70,000원(3년)
기관회원 : 150,000원(1년), 360,000원(3년)
개인평생회원 : 1,000,000원
단체평생회원 : 3,000,000원

【회원특전】

연구소 주최 연구행사 초청 / 연구소발행 출판물 무료 제공 /
기존 출간도서 구입시 20% 할인

【회원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주 소 : 461-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 세종연구소 연구지원 · 홍보팀 |
연락처 : Tel. 031-750-7612 / Fax. 031-754-0100
e-mail: public@sejong.org

정세와 정책 | 2014년 4월 1일

발행인 | 송대성 편집인 | 이대우 편집기획위원 | 강명세, 엄상윤, 이태환, 정상화, 홍현익
편집간사 | 이재화 발행처 | 세종연구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461-370)
전화 | (031)750-7613 팩스 | (031)754-0100
홈페이지주소 | www.sejong.org

- * 『정세와 정책』은 세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출판물로 주요 국제정세와 한국의 대외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 『정세와 정책』에 개진된 의견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